

금융자산 사상 첫 3000조 돌파… 내년 ‘주식·금’ 투자 확대

‘한국 富者’ 설문조사 결과 분석

금융자산 10억 이상 47만6000명
총 3066조, 전년 대비 8.5% 증가

부동산 비중 감소, 금 등 투자 다변화
단기·중장기 투자처 1위는 ‘주식’
수도권 집중, 서울·경기 거주자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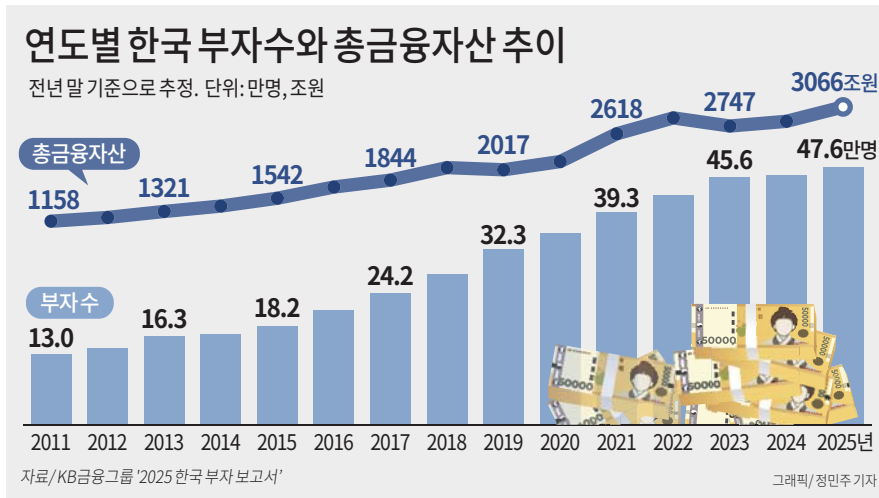
한국 부자들의 금융자산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앞으로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금과 가상자산 등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14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는 2025년 47만 6000명이다. 지난 2011년 13만명에서 15년 동안 3배 이상 늘어 연평균 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0.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과 부동산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형 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개인 심층인터뷰 결과를 분석했다.

◆ 금융자산, 3000조 돌파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 규모



는 3066조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1년 1158조원에서 연평균 7.2% 늘었다.

금융자산은 주식 강세장이 겹친한 금융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2826조원) 대비 8.5% 증가했다. 반면 총부동산 자산은 2971조원으로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작년(2802조 원) 대비 6.0% 증가에 그쳐 과거와 비교해 상승폭이 둔화됐다.

총자산 포트폴리오에서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줄고 기타자산의 비중이 늘어났다.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2011년 58.1%에 이어 2012년 59.5%로 높은 비중을 차

지했지만 2025년 54.8%까지 낮아졌다. 투자 비중에 큰 변화가 없는 금융자산과 달리 기타자산의 경우 최근 금·보석 등 실물자산과 대체 투자처로 새롭게 부각되는 가상자산 등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한국 부자의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한국 부자의 총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자산은 ‘거주용 주택’으로 31.0%를 기록했고, 현금과 수시입출식 예금 등의 ‘유동성 금융자산’ (12.0%), ‘거주용 외 주택’ (10.4%), ‘예적금’ (9.7%), ‘빌딩·상가’ (8.7%), ‘주식’ (7.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년과 비교하면 주가 상승으로 ‘주식’의 비

중이 소폭 높아졌다. 지난 1년간 금융투자에서 ‘수익’을 경험한(34.9%) 부자가 ‘손실’을 경험한 부자(9.4%)보다 3.7배 많았었다.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기준’은 꾸준히 100억원을 유지해 온 반면 이들이 부를 이룬 원천은 일부 변화가 있었다.

부를 이룬 원천 1순위가 ‘부동산투자’와 ‘상속·증여’ 중심에서 ‘사업소득’으로 옮겨가고 ‘근로소득’과 ‘금융투자 이익’으로 부를 늘린 경우도 늘었다. 자산관리 관심사 역시 부동산투자 대세론에서 금융투자, 실물투자, 리밸런싱, 가상자산까지 점차 다양해졌다.

◆ 내년 유망 투자처 ‘주식’ 1순위

한국 부자의 2026년 금융투자 기조는 불확실한 환경 속 ‘현상 유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단기(내년)와 중장기(향후 3~5년)에 걸쳐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로 과반에 가까운 한국 부자가 ‘주식’을 공통적으로 1순위로 꼽았다.

단기 고수의 투자처로는 과반이 넘는(55.0%) 부자가 1위로 인공지능(AI) 주도의 기술성장과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예상했다. ‘금·보석’ (38.8%), ‘거주용주택’ (35.5%), ‘거주용외주택’

(25.5%), ‘펀드’ (14.0%), ‘빌딩·상가’ (12.8%), ‘가상자산’ (1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향후 3~5년 이내 중장기 수익률 역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처 1위는 단기와 동일하게 ‘주식’ (49.8%)이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추정된 올해 한국 부자 중 절반 정도(43.7%)인 20만 7000명이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었다. ‘경기도’ (22.5%)와 ‘인천광역시’ (3.1%)에 각각 10만 7000명, 1만 5000명이 거주해 수도권에 33만명(69.2%)이 집중됐다

황원경 KB경영연구소 부장은 “한국 부자의 지난 15년 발자취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한국 부자가 부를 축적해 온 과정에서 터득한 부에 대한 철학과 실천 행태를 살펴보고, 이들이 전하는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지혜를 참고해 미래의 부자가 새롭게 부의 길에 올라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 15년의 흐름과 2025년 현재, 나아가 미래까지 종합적으로 돌아본 이번 보고서가 부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자산 축적의 기본 원칙과 실질적인 노하우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수백억 부자된 비결?… 일해 돈 벌고, 공부해 투자 수익”

부의 1순위 주된 원천은 사업소득 부동산 관심 줄고, 금·예술품 투자 ↑ 장기 전략과 금융 지식이 핵심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멀리 있지 않았다. 대대로 재산을 물려받거나 일확천금을 노렸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사업이나 근로소득으로 종잣돈을 모아 금융투자로 수익을 냈다.

14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가 부를 이룬 주된 원천으로 꼽은 1순위는 ‘사업소득’ (34.5%)이었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이익(22.0%)과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16.8%), ‘상속·증여’ (16.5%), ‘근로소득’ (1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 2011년에는 1순위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5.8%가 ‘부동산 투자’에 따른 이익을 꼽았고, ‘사업소득’ (28.4%), ‘상속·증여’ (13.7%) 등이 상위 3위에 올랐다.

투자 관심사 역시 부동산투자에서 금융투자와 금·예술품 등 실물투자나 디지털 자산 등의 대체투자로 관심이 확대됐다. 투자 리밸런싱이나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자산관리 상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2011년 당시만 해도 ‘부동산투자’에 가장 관심이 많다는 응답자가 42.2%로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2015년 18.5%, 2020년 21.8%, 2025년 14.8%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금, 예술품 등의 실물투자는 2011년 2.0%에서 2015년 4.3%, 2020년 7.0%, 2025년 15.5%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이외 ‘국내외 경제동향정보’도 2011년 2.3%에서 2025년 10.3%로 높아졌다.

현재의 부자가 미래의 부자에게 전하는 성공적 자산관리를 위한 지혜 1순위는 ‘지속적으로 금융지식을 습득해야 한

다’ (15.0%)라는 의견으로 스스로 금융지식을 쌓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자산이 많을수록 지식 습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총자산 규모별로는 ‘총 자산 100억원 이상’ 부자 가운데 19.4%가 1순위로 택했으며, ‘50억원~100억원 미만’ 부자는 14.2%, ‘50억원 미만’ 부자는 14.0%에 그쳤다. 차순위로는 ‘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분산투자’ (14.5%)를, 3순위로는 ‘시장을 보는 안목과 통찰력 구비’ (13.5%) 등을 꼽았다.

한국 부자가 전하는 자산관리 팁 1위는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세울 것’

(11.8%)으로 한 방을 기대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부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다음으로 과도한 투자나 레버리지 등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 것’ (11.3%), 정보를 찾기만 하지 말고 ‘직접 투자를 실행할 것’ (10.5%),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따라하기 보다 ‘내 판단에 따른 투자를 할 것’ (9.8%) 등이 뒤를 이어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와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돈을 모을 때 실행력을 제고하는 동인인 총자산 ‘목표액’은 2011년 평균 75억원에서 2025년 152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안상미 기자

정부, 내년 주 4.5일제 시범사업 추진… 예산 324억 편성

근로시간 단축, OECD 수준 목표 노동계는 찬성, 경영계는 신중 입장 워라벨 프로젝트·10시 출근제 시행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내년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임금 삭감 없는 단축 가능성, 노동생산성 저하 여부, 추가 비용 부담 주체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주 4.5일제 도입 시범사업 관련 예산 324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워라벨+4.5 프로젝트 시범사업(276억원)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원) 등이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여전히 긴 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을 웃돌았다.

노동부는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법에는 국가·지방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주 4.5일제를 둘러싼 노사 반응은 엇

갈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건강권을 침해하고 생산성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주 4.5일제, 나아가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한다. 금융권에서는 금요일 조기퇴근 방식의 주 4.5일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에 합의했다.

반면 경영계는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주 4.5일제를 노사 관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 과제로 꼽아왔다. 법정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유연근무제 확대와 연장근로 관리체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

금 삭감 여부, 노동생산성, 추가 비용 부담 등 핵심 전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 4.5일제 논의의 핵심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의 가능성”이라며 “생산성 향상과 비용 증가에 대한 검토 없이 정책적 기대만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공공·민간 부문에서 제도와 운영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며 “주 4.5일제 역시 근로시간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 부담과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대기업·금융권 중심으로만 혜택이 돌아갈 경우 노동시장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김현경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는 지적이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시간 조정보다 연장·휴일근로 관행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업종별로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부터 제한적으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